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과 사회모델 전환

일시: 2017년 1월 25일

강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입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 여러 활동과 사업에 대해 감탄과 존경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희망제작소와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데 희망제작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후원회원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온 것인데 아시다시피 한국사회가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하나 걱정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닌 여러 문제들, 그 와중에 국내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은 했어도), 지금의 양상으로까지 진행됐으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 했던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1953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을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과 사회모델 전환'이라고 주셨습니다. 사회모델은 제가 써오던 말이고, 정치사회 지형은 희망제작소에서 요청받은 부분입니다. 서울대에서 강의도 하지만 6년째 사회발전연구소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한 지는 9년 넘어 10년차입니다. 우리와 비교대상이 되어야 할 OECD국가 중심으로 10여개 국가의 사회모델을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온 것은 건너뛰고, 핵심적인 것은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의 상호 제약입니다.

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이중화' 사회

희망제작소 연구보고서를 보니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 가지,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문제지만 더 고약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하나 풀기 어려운데 세 가지가 발목을 꼭 잡고 서로 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어려운 숙제를 푸는 데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부터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남은 시간이 7~8년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악화되면서 시간이 지나 이제는 5~6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중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양극화인데 왜 그 단어를 놔두고 굳이 이 단어를 쓰느냐에 대해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극화'라고 하면 경제적인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을 먼저 생각합니다. 거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적 양극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양극화에 더해서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심지어 정체성의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영역에서 안쪽에 속한 사람과 바깥에 속한 사람이 구분됩니다. 내부자(insider), 외부자(outsider)로 갈라지는 게 이중화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을 쓰고 있었는데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중화의 문제는 한국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의 변동으로, 그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

니다. 또 하나는 세계화(globalization)입니다. 가뜰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세계화 때문에 그나마 있는 일자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함께 요즘 많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 더해지면 이중화 현상을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중화는 기술변동/세계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나타나는데 그 양상과 정도에 있어서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변동으로 기업은 예전처럼 고용을 유지하러기 어렵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OECD 평균에 비해서 한국은 비정규직이 두 배나 많습니다. 처음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더라도 3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결국 4배 차이가 납니다.

이중화를 제어하려면 적극적인 정치 개입 필요

공통 원인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이중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그렇다 쳐도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까지 심각해야 하느냐를 따져보면 한국만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어느 나라는 이중화의 후유증이 심가하고 어느 나라는 덜 심각할까요. 이 수위를 결정하는 변수는 이중화에 '정치'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느냐 여부입니다.

스웨덴은 (정치인/학자/노총/경총 관계자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복지국가 천국같이 말하지만, 20년 전에 비하면 복지가 많이 줄고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시장이 적어도 정치의 영향을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의된 틀 안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그 범위를 넘어서 시장원리만으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내 몰지 않습니다. 9년 동안 이 분야 연구를 해 오면서 15개 나라를 돌았고 그 나라의 정책연구자들을 200명쯤 만나서 심층인터뷰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20명 정도 만났습니다. 공통 원인으로 그 방향으로(복지의 축소/시장의 확대) 갈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하더라도, 정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을 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이중화는 덜 심해지고 무성의하게 개입하면 심해집니다.

한국은 '이중화'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불개입'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신년사라든지 취임연설을 들어보면 거의 모든 내용은 경제성장, 동북아정세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중화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겠다는 말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즉, 성장해야 하고 안보를 지켜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뜻이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독 이중화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주주의는 개헌 찬성 여론이 60%가 좀 넘고, 반대하는 여론이 30% 좀 넘습니다. 만일 개헌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헌법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헌법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가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드러나듯 대부분 문제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투표결과와 의석 수 사이에 괴리를 만드는 선거제도도 문제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성장시키지 못 하는 환경, 기초의원까지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 등이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심 끝에 그 시기를 잡아서 내놓은

것입니다. 앞뒤로 선거가 없으니까요. 이 안은 우리 선거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정답에 가까운 안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이 안을 발표한 바로 그 날, 새누리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첫 날은 환영한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바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대안에 몇 달 전 총선을 대입해 보니까 의석수를 손해 보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폭 줄고 민주당은 약간 줄어들고, 문제는 주로 수도권에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정답에 가까이 갈수록 현재 여당/야당은 의석수가 모두 손해입니다. 규모가 작은 정당들이 이득을 보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소수 유권자들의 의견도 그 비율만큼 반영되고, 그렇게 하려고 개편하는 거니까 거대 정당들은 손해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누리는 거대정당은 의석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대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쪽에서 개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선거제도라도 바꾸면 되고, 그건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예전보다 거대정당 규모도 작아졌는데, 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화와 고령화

이처럼 하나하나가 문제인데 이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화와 고령화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도 우리는 이미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34개국 중에서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2위와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세금이 필요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세원이 고갈되고 사회복지에 쓸 재원이 없으니까 이중화를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화가 가속화되면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슬픈 얘긴데 얼마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적 연구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미혼남녀들 중에 현재 연애 중인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조사했습니다. 대체로 34%. 미혼 남녀 3명 중 한 명은 연애 중이라는 얘기가. 이 미혼남녀들을 소득구간별로 나눠봤다.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시 분석해봤더니, 소득 최하위 구간은 대체로 15%. 6~7명 중 한 명이 연애 중이었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55%. 두 명 중 한 명이 연애 중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더라도 출산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연애는 해야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애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특히 외부자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의료보험관리공단 자료에서 나온 분석인데, 누가 아이를 출산했는지를 역시 소득구간으로 나눠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령화는 두 가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아이를 안 낳고, 하나는 기존 인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이중화가 진전되면 고령화는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의 삼각관계

이중화와 민주주의 관계를 보면, 민주주의는 이중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중화가 진전되면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뽑아서 대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중화가 진전되면 외부자의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세대로 보면 젊은이들이 2008년 총선이 46.1%로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습니다. 두 명 한 명도 투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65.5%. 20대 후반은 24.2%. 같은 선거에서 세대별로 42%p 투표율 차이가 납니다.

계층 간에도 하층/비정규직 투표율이 상층층/정규직 투표율보다 낮습니다. 촛불집회 참여자 조사를 해보니 농어민/생산직 참여가 낮았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책 사안이 있을 때 세대층들이 있다면 어느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정치인의 최대 목표는 재선입니다. 투표율이 그러하데, 어느 쪽을 위한 정책을 펴겠느냐를 따져보면 내부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의제 민주주의가 훼손됩니다.

고령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면, 고령화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고령층이 민주주의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독일은 고령층이 젊은층보다 민주주의에 투철하고, 관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고령층이 되기 전 어느 정도 완성된 복지국가,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고령층이 되고 나서 관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고령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수화됩니다. 한국처럼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르게 고령화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반면교사의 대표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20~25년 빠릅니다. 10~2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본을 보면 도움이 될 텐데 일본은 재정적자가 지속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해도 안 빠고 해마다 재정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2~3년만 재정적자여도 큰일 났다고 할 텐데 그런 나라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은 누적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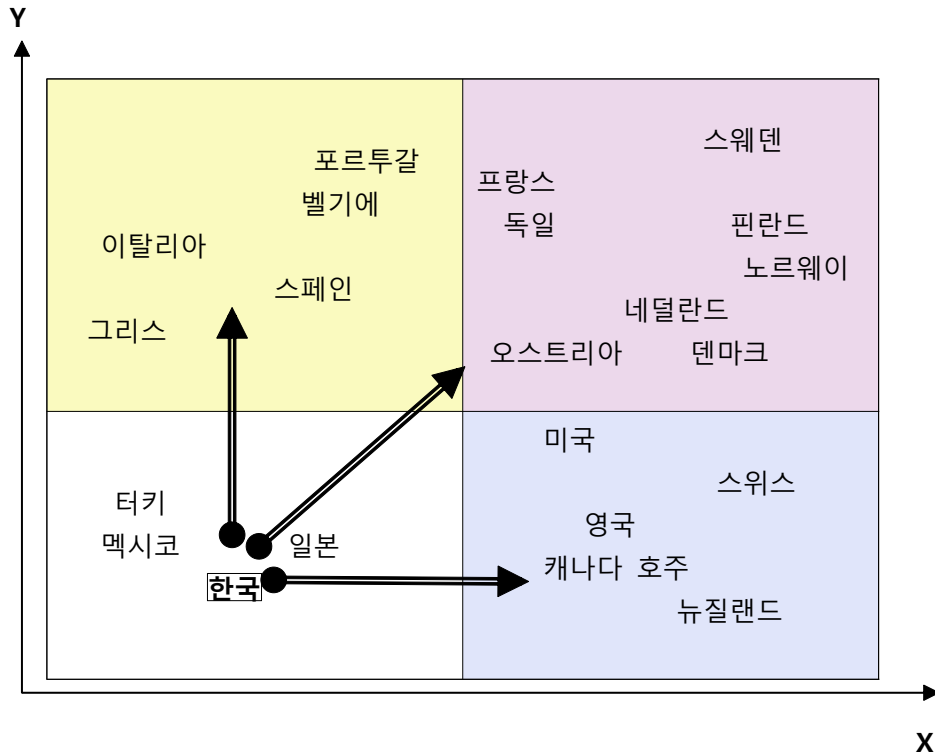
공적사회지출은 크게 연금/노동/의료/가족으로 나뉩니다. 노동이나 가족 부문에 쓰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쉬운 해고, 고용유연화가 되면 많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노동시장에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도 노동시장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적든 세금을 내지만 밖으로 나오면 바로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합니다. 기업 부담은 적어지지만 납세자 부담은 커집니다. 고용시장에 있도록 하면 거기에 쓴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에 쓰는 돈은, 태어난 아이가 20년 지나면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60살까지, 20년 간 도와주고 40년 간 세금 받으면 이득입니다.

가장 문제는 연금과 의료 부문입니다. 쓰고 끝나는 돈입니다. 일본 재정적자 대부분은 연금과 의료에서 나옵니다. 연금개혁을 하지 못 합니다. 유권자 3분의 2가 연금수혜자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연금 줄이는 공약을 하겠습니까. 한국도 빨리 대처하지 못 하면 조만간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전되면 사회모형을 바꾸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정치체제는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고 4년 동안 한두 번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고령화를 이용합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고령층을 결집시켜서 그들의 압도적 지지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야당은 그에 대항해서 어떻게 청년층 결집할까에 골몰하는 등 서로 이용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발목을 잡는 데서 굉장히 많은 사회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적으로 잊히지 않는 장면 중 하나는 일본의 노총(렌고) 전직 의장(현 국제이사)이 70대 중반 점잖은 신사인데, 이 분을 만나서 제가 한 첫 질문이 “지금 일본 사회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한 1분 대답을 못 하고 하늘을 보고 가만히 있더니 “고리에 녹이 슬어서 뺄 수 없게 됐다고 할까?” 하면서 말을 맺지 못 했습니다. 뒷말을 안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이 풀기 어려운 고리로 얽여있고. 그 상태에서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확 진전돼서 녹까지 슬어버리니 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뜻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한두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도대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것입니다. OECD 34개 국가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를 다 갖다놓고 그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다 걸러내고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28개 변수를 사용해서 무엇 때문에 이 상태가 되었는지 분석한 결과가 이 표입니다.



28개 변수를 두 개 축의 2차원 평면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Y축은 복지지출·재정건전성. X축은 신뢰·부패·거버넌스. 한국은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은 좋습니다. 지속가능성 문제는 있지만 복지지출이 낮습니다. 돈은 차 있는 건데 거버넌스가 엉망입니다.

(*Y 축의 위로 갈수록 복지지출이 높고, 아래로 갈수록 재정건전성이 높음/ X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뢰, 거버넌스 지수가 높다)

2012년 대선 전후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MB정부의 업적 몇 가지를 말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에도 재정건전성을 지켜낸 것이라고 했는데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권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으니까. 출전한 적이 없는데 무패라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지출을 많이 했는데 재정건전성이 좋은 건 자랑할 일이지만 복지지출을 안 하고서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자랑하는 건 출전 안 했는데 무패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고령화 때문에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영역입니다.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PIGS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의 동정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 나라들이 있는 영역으로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대각선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스웨덴 같은 북유럽 사민주의 혹은 독일 같은 조합주의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복지지출을 최소화 하고 대신 거버넌스를 대폭 개선해서 미국, 캐나다 등 영미 자유주의 국가 모델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요즘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오른쪽은 고사하고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양율입니다. 한 명이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인원을 나타내는 부양율은 2040년이면 75, 2050년이면 95로 거의 1대 1 부양사회가 됩니다. 2040~2050년 경제활동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사람은 지금 20~30대입니다. 그런데 취직이 안 돼서 난리인 N포세대가 50대가 돼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내서 우리를 부양해 준다는 게 전혀 가능성 없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청년 세대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부양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변곡점이 5~6년 남았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제일 숫자 많은 인구집단이 피부양자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그래프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시점부터 부양율의 변화를 길에서 느낍니다. 터키에 갔을 때 아이들(청년)이 바글바글한데, 우리도 그렇게 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인구변화는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돼서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삼겹살 한 끼 푸짐하게 먹는 건 괜찮아도 매일매일 20년 먹으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부양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납세자/피부양자 비율이 지난달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변화에 직면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야지'라는 쪽이 많을까요. 아니면 '보통 일이 아니네, 이민 갈까'라는 쪽이 많을 겁니다.

서울대 학부생 사이에 이민 동아리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10~20년 후 이민 가는 전략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때 되면 극심한 공포(패닉)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공포가 퍼지면 정책수단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는 굉장히 괴로운 정부가 될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 소득 100달러로 90의 부양율을 지탱했는데 지금은 2만 달러가 넘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1970년대 총 부양률 90 중에 아동부양이 85. 노인은 5에 불과했습니다. 길거리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2050년 95라는 부양율 중에 노인이 75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부양과 노인부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은 부양하면 커서 40년간 세금을 내는데 노인은 아닙니다. 아동은 몇 년간 부양해야 할지

거의 정확하게 알지만 노인은 모릅니다. 부담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모델 전환이 해결 방법

사회모델 전환이 없다면 누가 해결할 것인가. 동북아 원전 안정성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원전이 일본에 23기, 한국에 22기인데 중국에는 건설계획이 끝난 것까지 200기가 있습니다. 동남해안에 모여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관리 같이 꼼꼼한 건 중국이 더 잘 할까, 일본이 더 잘할까요.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과연 200개 원전을 안전하게 끝까지 관리해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터지면 편서풍을 타고 그대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터지지 않더라도 바닷물로 엔진을 식힌 온배수가 서해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소양담 50개 분량입니다. 서해바다 생태계 교란은 정해져 있는 재앙입니다.

중국에 원전 짓지 말라고요? 국제적 원전 협약을 체결하고 동북아 원전 안전성 기구를 만들어 서로 감시하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해야 합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나라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도덕적 권위를 가지는 길 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투명성을 달성하고 권위를 보여준 후 그 다음 따라오라고 해야 합니다. 즉, 정당성과 명분이 필요한데 우리 원전 투명성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가장 오래된 월성 1호기의 사용연한은 몇 년 전 끝났습니다. 사용연한 연장 결정은 외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그 결정을 할 때 정부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새벽 1시에 야당 의원들 퇴장하고 정부여당 의원끼리 표결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정치체제 문제를 해결 못 하면 원전문제, 온난화로 인한 문제, 해수면 상승 및 범람 이 모든 재앙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인천이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 호남. 경남 모두 위험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수준이면 2100년이면 김제, 군산 다 해수면 상승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5년짜리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엔, 그리고 4년짜리 전남지사가 해결하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재선이 안 될 텐데요.

Q. 긍정적인 변화는 없을까요. 극복을 위한 첫 스텝은 무엇인가요?

당장은 크게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이중화/고령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고, 정치 변화가 그나마 지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이 왔는데 지금은 누가 대통령 되느냐, 정권교체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최소한 이런 정도 하게 될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두 달 넘는 기간 연인원 천만 명 넘는 시민들이 모인 촛불집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 공공성 강화입니다. 우리가 60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자기 일 알아서 해결하는 건 뛰어난데 같이 해결하는 건 못 하는 사회,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시민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분들한테 스펙 쌓으라고만 덜 해도 공공성이 높아집니다. 스펙이 전국적 현상인 것 같지만, 데이터로 보면 중산층 현상입니다. 하층은 스펙 쌓을 여유가 없고 최상층은 쌓지 않습니다. 중산층끼리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무의미한 경쟁, 그것만 덜 해도 미래 성장 동력과 공공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